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 표출에 보수파는 호들갑 떨지 말라

해화역 물가 반대
6만 명 시위
여성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6면

워마드 일부 회원들의
자극적 게시물
여성 차별에 대한
반감으로 이해해야

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유럽 순방은
극우파를 선동하는
것이다

3면

무역 전쟁과 불안한
중국 경제

8면

한 이집트
난민 신청자의 편지,
난민에 관한
거짓말 비판

4, 5면

이슬람 혐오
인종차별적 편견일 뿐

10면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반대 투쟁

현대모비스 파업,
기아차를 마비시키다

현대차 임금 인상 투쟁

2, 12면

현대차그룹의 임금 동결 선언

단호하게 싸워야 임금·조건을 지킬 수 있다

박설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바로는 3분기 제조업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한다. 여러 해 부진한 조선업은 물론 자동차 산업도 부진을 겪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7.3퍼센트 감소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도 2~3년간 완만하게 증가하던 고용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300인 미만의 중소 부품사들에서 고용 규모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완성차에서도 감소폭이 커졌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발 고율 관세도 커다란 골칫거리다.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미국으로 수출한 차량은 60만여 대다. 르노삼성의 경우, 국내 생산 물량이 절반가량 위탁 생산이고 미국으로 보낸다. 만약 미국 정부가 실제로 수입차·부품에 2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속에서 사용자들은 어떻게든 위

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이윤몹을 지키려 한다.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강도를 높이고, 외주화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현대차 사측은 “임금 인상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그것이 올해 임금 협상의 최우선 목표라고 제시했다.

사측은 또, 노동시간을 단축(주야 8+8 교대제)하려면 노동강도를 높이고 휴일·휴게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부서에서는 임금 삭감, 외주화,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밀어붙이려 한다.(얼마 전 기아차 화성공장 도장부 노동자들은 나흘간의 현장 파업으로 사측의 공격에 제동을 걸었다.)

현대차만이 아니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전반에서 임금 동결, 단체협약 개악, 구조조정과 외주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 노동 유연화, 호봉제 폐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유예와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추진하며 이런 사용자들의 공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사용자들은 “회사가 어렵다”, “미래

를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 흘려 일하며 엄청난 부를 만들어 온 노동자들은 충분히 임금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더구나 현대차그룹은 지난 2년새 사내유보금이 14조 원 이상 늘어, 무려 135조 8870억 원이나 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억제되는 동안 정몽구는 주식 배당금을 계속 늘려 지난해에만 887억 원(계열사 포함)을 챙겼다.

노동자들이 임금·조건 개선 요구를 자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금속노조는 제조업 생산에 타격을 가할 강력한 힘이 있다. 대중 행동, 특히 파업으로 요구를 따낼 수 있고, 이에 고무반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등 성과를 낼 수 있다.

6월 30일 민주노총 조합원 8만 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고, 이어 7월 13일 금속노조 파업 집회에도 2만 명이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을 가득 메웠다. 기층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이 쌓여 있다. 금속노조의 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 단호하게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



사진 출처 금속노조 현대모비스화성지회

현대모비스 파업으로 기아차 화성 공장 생산이 중단되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조합원

7월 10일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임단투의 시작을 알리며, 4시간 파업을 했다. 그러자 1시간 뒤쯤 기아차 화성 공장의 생산이 4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다. 현대모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저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파업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말했다. “처음 파업을 해 봤는데, 우리가 모비스와 기아차 공장을 멈출 수 있다는 힘을 느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관리자들이 우리 눈치를 봅니다.”

현대·기아차는 2000년대 들어 주요 부품 생산을 외주화·모듈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늘렸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 계열사들은 완성차 공장 바로 앞에서 부품을 즉시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몽구의 아들 정의선은 글로비스와 모비스의 지분 매입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정의선은 한국의 부자 순위 9위에 올랐다. 그러는 동안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었다.

현대모비스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을 계기로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섰다.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노동자들은 그 중요한 일부다.

노동자들은 올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96퍼센트의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10일 첫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올해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등 부품사 8개 노조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 노동자들은 13일 금속노조 파업 집회에도 대거 참가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노동자들은 완성차 생산에 타격을 입힐 막강한 힘이 있다. 이 노동자들이 자기 힘을 최대한 끌어내 요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완성차 노동자들도 함께 연대해야 한다.



2018년 7월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 그룹 사옥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집회에 수만 명이 참가했다

양보론의 다른 이름이 연대임금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로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완성차 정규직의 임금 요구를 낮추는 대신 현대차 사측에 부품사·비정규직의 임금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하후상박은 임금·조건에 상향평준화를 위한 연대를 뜻하는 훌륭한 전통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투쟁해 사용자들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금속노조 지도부가 추진하는 ‘연대임금’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용자들에게 우리 몫을 늘리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공장 정규직의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을 낮추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지부 하부영 지부장은 대공장의 임금 투쟁이 부품사·하청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만 늘려 왔다고 폄하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대공장 정규직이 잘 싸워 임금 인상을 쟁취하고 조건을 방어하면, 부품사·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싸움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대공장에서 임금이 억제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대차의 임금 수준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기준 설정

자 구실을 해 왔다.

그런 점에서 연대임금론(양보론)은 부품사·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만 끼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현대차지부 지도부가 투쟁을 발전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타협을 한 결과, 부품사·하청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도 더 어려워졌다.

진정한 하후상박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공장 정규직의 임금 자제가 아니라, 단호한 투쟁을 통해 사용자들을 강제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직무교육 빙자한 고통전가를 고발한다

김종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1000여 명이 휴직·교육 중이다. 나는 그중 한 명이다. 2017년 10월부터 5주간 ‘직무 교육’ → 5주 휴직 → 10주 교육 → 10주 휴직을 반복하고 있다. 8개월 가까이 일을 못하고 있다.

“체적 변형률 = $a^3(1+\varepsilon_1+\varepsilon_2+\varepsilon_3)-a^3/a^3$ ”

이게 뭘까? 직무 교육 내용의 일부다. 현장에서 전혀 쓰지 않는 복잡한 수학 계산식을 배우고 시험을 친다. 노동자들을 얹혀 두고 수학 문제를 풀라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성공자들을 만들어 해고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

교육 대상자는 주로 활동가들이다. 사측은 우리의 발목을 묶어 두려고 일부러 공장서 먼 곳에 교육장을 잡았다. 차로 1시간 30분 거리인 곳까지 보냈다.

교육장은 페인트 냄새가 심했다. 많은 이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

다. 우리는 전부 밖으로 나와 반발했다. 그러자 사측 관계자들은 수업 거부하면서 임금을 깎아 버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의를 계속했다. 결국 사측은 환경 측정이라도 해야 했는데, 이산화탄소 지수가 평균치보다 2배 넘게 나왔다!

결국 마스크를 호소하던 한 노동자가 쓰러졌다. 그 뒤에도 또 한 명이 쓰러졌다. 엠볼러스를 불렀지만 근처에 병원이 멀어서 한 시간이나 걸렸다.

나는 어렵사리 교육을 끝냈지만 사측은 조선업 경기가 불황이라며 휴직하라고 했다. 노조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불황이 왔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위기의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경영진에게 있다.

나는 아직 언제 복직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있다. 아침마다 창 밖으로 출근하는 노동 형제들을 보고 자괴감도 느낀다.

하지만 나에게 항상 함께해 준 동지들이 있다. 끝까지 투쟁해 꼭 승리할 것이다.

사진 출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장우성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퍼센트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3260원(43.3퍼센트) 올린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35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 문재인도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폐기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삭감법에 이어 형편없는 인상률로 연거푸 주먹질을 해 놓고 내미는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 노동자들은 많지 않다. 보수 언론들은 ‘연속 두 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폐 기로’라며 호들갑을 떠다. 그동안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프랜차이즈 본사와 카드 회사의 높은 수수료, 높은 임대료 등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자들이 말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하면서 중소기업인 핑계를 댔다. 그러나 고려대 김성희 교수의 분석을 보면, 최저임금 삭감법 때문에 최저

임금은 2.74~7.7퍼센트 삭감됐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실제 인상률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인 7.4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률’인 셈이다.(민주노총) 예를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현재 1년차 연봉기준 2350만 원,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연봉 19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복지비 19만 원(교통비 6만 원, 급식비 13만 원) 중 6만 7840원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이 10.9퍼센트 인상되더라도, 실제 인상률은 월 3만 4600원(2.1퍼센트)에 불과할 수 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처럼 형편없는 인상률에 대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한술 더 떠서 7월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사용자와 보수 언론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고용 악화의 책임은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있다. 사용자들은 조선업, 한국GM 등에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주52시간 도입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고용확대가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주52시간 위반 단속 유

예, 탄력근로제 활용 권장 등으로 기업편을 들어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도 정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 준다. 최근 ‘무역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용자들도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얼마 전 현대차그룹이 임금동결을 선언한 것이나,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이를 보여 준다. 사용자들도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얼마 전 현대차그룹이 임금동결을 선언한 것이나,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이를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충족하기는커녕 오히려 양보를 강요받는 통로 구실을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입증됐다. 한국노총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79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압력에 8680원까지 후퇴했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이 7월 3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이후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와 후속 정책 협의도 했지만 결과는 형편없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돌아왔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낳았을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8만여 노동자들 6월 30일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랬다면 한국노총처럼 최저임금 삭감법의 피해를 벌충할 수도 없는 후퇴안을 내도록 강요받았을 것이고, 그마저도 사용자측의 방해로 좌절됐을 공산이 크다. 그러면 이후 투쟁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6월 30일 노동자 8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삭감법을 규탄

한 데 이어, 7월 12일과 13일에도 건설, 금속 노동자 수만 명이 상경 투쟁을 벌였다. 다음 주에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이런 투쟁들이 더욱 확대 강화돼야 기업과 정부의 공세로부터 노동자들의 조건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유럽 순방은 극우파를 선동하는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타리크 알리는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중도좌파·중도우파 주류 정당과 언론들에 ‘극단적 중도파’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들 극단적 중도파는 도널드 트럼프의 유럽 순방을 보면 그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의 국정 수행은 분명 변덕스럽고 때때로 멍청하기도 하다. 트럼프가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에게 유럽연합을 고소하라고 조언한 것은 그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4차원인지 보여 준다. 그러나 기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트럼프의 임기응변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칫 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과소평가하기 쉽다. 트럼프가 애청하는 극단적 보수주의 뉴스 프로그램 〈폭스 앤드 프렌즈〉는 그의 유럽 순방을 “세계적 분열 일으키기 순방”이라고 불렀는데, 정말로 그랬다. 트럼프는 정확하게 유럽의 극단적 중도파들, 그중에서도 현재 유럽연합을 좌지우지하는 중도우파를 정조준했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가 독

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 화력을 집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메르켈은 유럽의 주도적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허영으로 가득 찬 트럼프로서는, 2016년 11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했을 때 온갖 아침편들이 메르켈을 두고 “자유세계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한 것이 내심 못마땅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독일을 겨냥한 데는 전략적 이유도 있다. 트럼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동맹국과 교역국들에게 체계적으로 강탈당해 왔다고 여긴다. 당연히 그에게는 중국이 최대 강탈 국가이고,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는 7월 15일 이렇게도 말했다. “무역에서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보면, 유럽연합은 적이다.” 게다가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데다가, 국방비가 국민소득의 1.2퍼센트밖에 안 된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목표로 설정한 2퍼센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구축한 국제기구들, 예를 들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은 사실 미국에 불리하게 작동해 왔다고 굳게 믿는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국제기구들을 뒤흔들려 애쓴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국민소득의 4퍼센트로 인상하라고 요구한다.(미국 자신도 3.1퍼센트이면서 말이다.) 새로운 동맹 바로 이 대목에서 트럼프의 비일관성과 허영심이 끼어든다. 트럼프는 국방비를 국민소득의 2퍼센트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를 부인했다. 안보 전문가 로런스 프리드먼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트럼프식 외교는, 실질적 증거는 없고 상대방은 불만을 제기하는 거래 내용을 공공 속인 채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던질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은, 그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래가 그의 상상 속에서만 이행되는 것에도 과연 그가 만족할 것이냐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

기 정책의 실제 결과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메르켈 공격은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그는 나치 정당인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다), 이탈리아 부총리 마테오 살비니 등 유럽에서 집권한 극우 정부들과 반쯤은 손발을 맞춘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영국 보수당 내 분파 투쟁에도 거칠게 개입했다. 이는 메이의 ‘체커스 합의’(영국 총리 지방관저(체커스)에서 메이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내각과 합의했다에 반발해 외무장관에서 사퇴한 보리스 존슨 등 [집권 보수당 내] 강경 브렉시트파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듯이,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반란군들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대서양 동맹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다행히도 존슨은 너무 굵프고 소심해서 트럼프의 지원 사격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르반, 쿠르츠, 살비니는 어릿광대가 아니

다. 그들은 이미 메르켈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등 유럽의 극단적 중도파 정치인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는 대서양 양쪽 모두에서 극우 세력을 고취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정치 제도를 뒤엎으려 애쓰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우선, 트럼프든 그의 유럽 동맹자들이든 신자유주의가 아닌 진정한 대안이 없다. 그들이 가장 주로 쓰는 무기는 이민자 배척적 인종차별인데, 극단적 중도파는 그런 요구에 타협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는 진정한 파시스트 세력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영국의 거리에서 파시스트들이 활발한 것에서 보듯이 말이다. 그러니 그의 백악관 수석 전략관이었던 스티브 배넌이 [파시스트인] 토미 로빈슨의 석방을 요구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트럼프의 영국 방문과 파시스트에 반대해 일어난] 7월 13~14일의 시위는 반격의 시작을 선포했다. 그러나 앞으로 거친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13호 번역 차승일

난민 심사 결과 발표 예정

예멘 난민 수용하고 섬 떠나는 걸 허용하라

7월 12일자 '예멘 난민 반대 청원 70만 명 - 난민은 위험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축약되지 않은 기사는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법무부가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심사 결과를 이르면 7월 셋째 주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예멘인들이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은 예멘이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레스)라는 엄연한 사실을 못 본 척 한다.

난민들이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했다는 주장도 애먼 사람 잡는 것이다. 정부 박해와 전쟁 때문에 황급히 나라를 떠나는 사람에게 비자를 받아오라는 것은 처음부터 비현실적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난민 다수 발생 국가들을 겨냥해 비자를 요구해 사실상 난민 신청을 억눌러 왔다. 중동에서는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지원하면서도 그 피해가 가장 큰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에게 비자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가 늘자 이집트도 무비자 입국 국가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집트는 반혁명으로 500명이 한꺼번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정치 탄압이 혹심한 데도 말이다.

지금 정부는 난민법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쥐꼬리만한 생계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멘 난민들은 입을 모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한다. 예멘인들이 더 많은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들의 체류를 허용하고 출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

난민 수용하면 범죄가 는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한 달 동안 71만 명이 이름을 올렸다. 난민 탓에 범죄가 늘 것이라는 우려



'가짜 난민' 프레임은 근거 없는 악선동에 불과하다

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난민 수용 거부감을 보인 응답자를 상대로 한 설문에서도 거의 절반에 달하는 45퍼센트가 '난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그러나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 비율은 내국인보다 현저하게 낮고, 특히 체류 자격이 취약할수록 더 낮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는 길어야 1년, 대체로 2~3달마다 당국에 신고해야 할 정도로 체류 자격이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 "2017년 체류 외국인

수가 전년대보다 증가했음에도 외국인 범죄는 오히려 감소했다."(7월 5일 법무부 보도자료)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율 급증' 같은 자극적인 보도도 크게 왜곡된 것이다. 실제로는 지난 몇 년간 제주도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5배 가까이 늘면서(2010년 77만여 명→2016년 360만여 명) 각종 사건사고가 잦아진 탓이 크다. 더욱이, '외국인 범죄'로 분류된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은 신호 위반 등 '교통 범죄'였다.

제주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주장도 통계에 의한 착시 효과다. 보통, 범죄율은 인구 수 대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로 계산하는데 제주도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 값이 크게 왜곡된다(거주민 67만 명 vs. 내외국인 관광객 1500만 명). 관광객은 범죄 건수를 집계할 때는 포함되지 않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 값이 크게 왜곡된다(거주민 67만 명 vs. 내외국인 관광객 1500만 명). 관광객은 범죄 건수를 집계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유동인구를 고려해) 인구를 늘려 계산하면 [제주도의] 범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난민 비방운동가들의 다양한 거짓말

난민 유입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다는 주장은 난민에 대한 비방일 뿐이다. 이런 비방이 힘을 발휘하는 데에는 그동안 서구 지배자들이 퍼뜨려 놓은 무슬림 혐오가 크게 작용한다.

미국과 서유럽의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이슬람이 여성을 천대하고 폭행하는 종교라는 생각을 수십 년 동안 부추겨 왔다. 특히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서구 지배자들은 이슬람의 '폭력성'을 탓한다. 자신들이 시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쟁을 일으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현지 독재자를 후원한 사실은 감추고 말이다. 이에 대한 분노가 테러의 진정한 원인이다.

난민 비방 세력은 '국민이 우선이

다'라는 포퓰리즘 기치로 포장해서 이런 무슬림 혐오를 퍼뜨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우익이 흔히 써먹은 수법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열린 두 차례 난민 반대 집회는 영락없는 이슬람 혐오 집회였다. 첫 집회부터 주최 측이 "엄선"했다는 연사는 버젓이 연단에서 '이슬람이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은 순전한 이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특정 종교 혐오가 아니"라는 주최 측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에 불과하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공격의 끔찍한 상황을 묘사하며 난민 반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가 지금도 중동을 폭격하고 있다는 것과 식

민지였던 알제리 출신 프랑스 국민들을 지독하게 차별해 왔다는 것이 그런 공격의 진정한 원인이다. 제국주의 전쟁과 인종차별을 없애야 난민과 테러도 줄어들 것이다.

지나치게 관대한 난민법?

난민법의 "허점" 때문에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다며 난민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난민 비방 우익의 주장도 거짓말이다. 2013년 이후 아랍 혁명이 패배해 중동·북아프리카에서 반혁명이 승기를 잡아 생지옥으로 변하자, 세계적으로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다. 그 가운데 극히 일부가 머나먼 한국까지도 온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난민법이 아예 없지만 2016년, 2017년 모두 한국보다 난민

신청자가 각각 1.4배, 1.9배 많았다.

우익은 '국민의 삶이 이토록 팍팍한데 정부는 난민 지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짓 선동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 활동가는 국내 난민의 처지를 이렇게 요약했다. "굶어 죽을 것인지, 법을 위반하고 살아남을 것인지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다."

난민 비방 우익은 촛불 집회 정신을 이어받는 양 행세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자신들이 우익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점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자 정치적 우익과의 친화성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7월 14일 2차 집회에서는 자유당 국회의원 조경태가 연단에서 발언했고, 다른 연사들은 "태극기를 흔드는 어머니 아버지들"께 고마움을 표했다.

우익과 타협하는 문재인 정부

난민 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그 진앙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와대는 한 달 가까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

청와대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우익이 영터리 내용으로 난민을 비방하고 청원 동참을 호소·조직할 시간을 허용했다. 이제 자유당 조경태와 김진태, 바른미래당 이연주 등 우익 국회의원들은 난민 비방 우익과 손을 잡거나 그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다.

난민 문제 주무부서인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6월 29일 발표한 난민 대책은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현행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반면 난민 비방 반박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 특히 법무부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난민 심사, 최소한의 인력도 갖추지 않은 난민 제도 운용, 법으로도 보장된 난민 신청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비판받아 왔다.

기존 난민법도 난민들 처우에 극도로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인정률은 오히려 더 낮아져 2017년에는 1.5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쟁 등으로 난민 신청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형편없이 낮은 인정률 때문에 자연히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많아졌다.

법무부의 '대책' 중에는 난민심판원 설치가 있는데, 난민 보호보다는 사실상 이의 신청을 빠르게 기각하거나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법무부는 "현재 [난민 심사] 이의신청 과정은 '밀저야 본전'이라는 셈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며 전부터 난민심판원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를 꺼내든 것이다. 기존의 난민법 개정안들이 대체로 난민 심사에서 절차적 권리 향상,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반면, 이번에 법무부는 우익 포퓰리즘 뒤에 숨어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국제적 책임을 운운하지만 실상 난민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난민 신청자를 범죄시하는 분위기를 이용해 박근혜의 대표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휘둘러 첫 구속자를 만들었다. 형법 상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아이시스(ISIS)와의 관계도 모호한 세력의 영상을 공유하고 가입을 권했다는 것만으로 한 난민 신청자를 구속한 것이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 열악한 처우 속에 내몰린 난민들을 더한층 억압하려는 정부의 난민법 개악과 무비자 입국 강화 등으로 더한층 고통을 당하게 생겼다. 예멘 난민을 수용하고 그들에 대한 출도 제한을 풀라는 것은 정말이지 최소한의 요구라 할 수 있다.

김종환



7월 12일 예멘 난민 연대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집트 난민 자이드 씨

난민 인정 소송 이집트인 인터뷰

“증거를 제출해도, 면접을 해도 답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이집트 난민 신청자인 **자이드 씨**(사진)가 자신의 사정이 한국 난민 제도의 문 제점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해, 자신의 얘기를 들려 주고 싶다며 본지에 연락 해 왔다.

나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 지는 팔레스타인 난민이고 어머니 는 이집트인이다. 국적은 아버지 쪽 을 따르기 때문에 이집트 국적을 받 지 못했다. 22살 대학생일 때이던 2005년부터 반정부 활동 시작했고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에도 참가했 다.

나는 2012년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그때 팔레스타인 국적이 문제라 됐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 하며 드디어 테러 단체 하마스가 이 집트에 침투했다며 떠들었다.

내 소식이 <알자지라>에 보도되 고, 동료들이 내 신분을 증명할 증거 를 많이 제출해 주고, 항의가 커지 자, 8일 만에 가석방이 될 수 있었다. 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어서, 38명 의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다.

2년이 지난 2014년 11월 18일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년이나 감옥에 있을 수는 없었다.

한편, 내가 가석방 상태로 있던 2014년 2월에 이집트 법이 바뀌어

내무부가 나에게 이집트 국적을 부 여했다. 나는 형 선고가 나온 뒤인 2014년 11월 26일 말레이시아로 출 국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도중, 캐나다에 정착한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다. 아 버지는 캐나다로 오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캐나다 대사관이 비자 발급 을 거부하는 바람에 갈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에도 돈이 떨어져서 더 지내기가 어려워졌다. 한국은 공식 적으로는 난민을 지원한다고 했고,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였다.

한국에는 2016년 4월 4일에 도착 했다. 4월 8일에 난민 신청을 하러 출입국관리소에 찾아가다. 직원은 듣기 귀찮아하며 저쪽에 가서 앉아 기다리라고 했다. 심지어 자신들 쪽 을 보지 말고 시선을 문에 고정시키 라고도 했다.

난민 신청 후 무려 10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중순에야 인터뷰를 하 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심사관은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었다. 사적인 질문도 던졌다.

결국 세 달 뒤에 난민 인정 거부 통 보를 받았다. 우선 내가 제출한 서류 일부에서 낱자 오류가 발견됐다. 이 집트에 있는 변호사에 연락해 서류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한국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거부 사유는, 내가 가석방 상태로 집에 있 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받던 상 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 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있었으면 감옥에 갈 상황이었다. 그 밖의 사유도 말이 안 됐다.

이런 결정을 받아 보니, 인터뷰가 무의미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이 들었다.

한국 정부는 우리의 삶을 망치고 낭비시키고 있다. 한국인들은 1분 1초도 아까워한다는데 우리 인생은 몇 년씩 낭비돼도 되는 것인가?

나는 지금 하수구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수의사로 일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회 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대 체 언제까지 하수구만 치워야 하는 가?

한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뿐 아 니라 자국의 난민법도 안 지킨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미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도망 쳐 온 사람들이다.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인터뷰·정리 박이랑
축약되지 않은 인터뷰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유럽연합의 인종차별 강화 규탄한다

1. 6월 28일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 담은 유럽에서 이민자 배척적 인종차 별이 강화되는 분기점이었고, 이는 향 후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낼 수 있다.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한 이후,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인종차별 과 성차별에 맞서는 자유와 관용의 수 호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이 회담에서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반(反)이민 어젠 다를 받아들였다.

2. 트럼프가 미등록 이민자의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시켜 보호시설 로 넘긴 일이 대중의 분노를 샀다. 그러 나 유럽연합은 아동뿐 아니라 난민 가 족 전체를 북아프리카에 억류시키는 소위 “하선 플랫폼”이라는 난민 강제수 용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민자들 을 강간하고, 고문하고, 납치하고, 밀 수하는 악랄적 무장조직이 전쟁을 벌 이는 나라인 리비아가 적절한 장소로 선택됐다. 이 회담은 리비아 해안 경비 대에 지중해의 난민선을 “구조하는” 독 점적 권한을 줬다.

3. 이 결정은 헝가리 총리 오르반 빅 토르, 나치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 한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 츠, 이탈리아 부총리 마테오 살비니 등으로 대표되고 유럽 곳곳으로 퍼지 고 있는 극우 정부들과 트럼프의 동맹 이 낳은 결과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 르켈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등 더 관대한 척하는 신자유주의적 중도 파 정치인들은 극우 세력에 양보함으 로써 극우의 힘을 억누르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타협은 반이민 정책을 더 과격하게 만들어 죽음의 악순환을 낳 고, 실제로는 극우 세력을 더 강화시 키고 있다.

4.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 들의 성장은 진짜 파시스트 세력에게 힘과 자신감을 주고 있다. 최근 이탈리 아 총선에서 [지독한 이민 반대 정당인] ‘동맹’의 승리는 인종차별적 공격을 몇 배로 증가시켰다. 트럼프와 미국의 ‘대 안 우파’도 파시스트들을 돕고 있다. 영 국에서도 [영국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 인] 영국독립당(UKIP)의 지지를 받는 축구사나이연맹과 파시스트 토미 로빈 슨을 중심으로 극우의 거리 운동이 급 부상하고 있다.

5. 유럽연합의 반이민 강화책은 아프 리카에서 제국주의적 개입의 수준을

더욱 높인다. 이탈리아는 카다피의 몰 락 이후로 리비아를 개조하는 데에 공 을 들여 왔다. 프랑스는 사헬 지역에 서 오래전부터 지속해 온 군사 개입 수 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아프 리카의 각국 정부에 이민 흐름을 막으 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아프 리카 사령부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의 군사 주둔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나이지리아에서 미군 특수부대 원 4명이 전투 중 사망했고, 미국은 가 나에 미군 기지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다.

6. 최근의 회에서 국제사회주의경 향(IST)은 위 정책(유럽연합의 인종차 별적 행보 강화)에 끈질기고도 확고하 게 반대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 우리는 국경 개방을 지지하고, 모 든 이민 통제에 반대한다. 이민자들이 아니라 기업주, 은행, 체제가 진정한 문 제이다.

●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방어하고 극우 세력과 트럼 프에 반대하는 가능한 한 폭넓은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 1970년대 반나치연합의 전통 위 에서, 최근 몇 년간 그리스의 인종차 별·파시즘반대운동, 독일의 ‘인종차 별에 맞서 일어서라’, 영국의 ‘인종차 별에 맞서 일어서자’와 ‘파시즘에 맞서 단결하자’, 카탈루냐의 ‘파시즘과 인종 차별에 맞서 일어서자’, 오스트리아의 ‘인도적 난민 정책 연합’, 프랑스의 ‘연 대 행진’, 아일랜드의 ‘인종차별에 맞선 단결’ 등이 생겨났다. 우리는 파시스트 들을 거리에서 몰아내는 대중 운동을 건설하기 시작함으로써, 파시스트들이 공공연히 선동하고 조직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 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벌이는 모든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그리고 중동 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방 국가들의 군사기지를 철수하라고 요구한다.

● 우리는 이 세계의 착취당하고 차 별받는 사람들의 국제 연대를 건설하 기 위한 모든 기회를 잡을 것이다. 오직 사회주의 혁명만이 자본주의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끝낼 수 있다.

국제 사회주의 경향(IST) 2018년 7월 13일
번역 오수민



사진 출처: Masydan Chernov

자본은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드는데 왜 노동계급은 이주할 자유가 없는가

해화역 몰카 항의 집회에 대한 마녀사냥

여성의 정당한 분노를 지엽적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2018년 7월 11일에 발표한 노동자연대 성명을 그 뒤 상황 변화를 반영해 개정증보한 것이다.

불법촬영(몰카)에 항의하는 해화역 3차 집회가 7월 7일 열렸다. 성차별 반대 집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주최 측 발표 6만 명). 주최 측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5월 19일 1차 집회와 6월 9일 2차 집회는 각각 2만여 명, 4만 5000명으로, 시위를 거듭할수록 참가자 수가 늘었다.

참가자들은 주로 10~2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스태프의 다수도 20대로 보였다. 놀라운 일이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차별 반대 집회를 이 젊은 여성들이 몇 달 세 세 차례나 벌인 것이다.

이 운동은 그동안 불법촬영(몰카) 수사·처벌 과정에서 만연했던 여성 차별에 대해 여성들이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그동안 사회에서 이등국민 취급받아 온 것 전반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대통령 하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 점은 2차 집회 뒤 나온 성명서와 3차 집회에서 두드러졌다.

실망

집회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차 집회 뒤 이렇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10대 공약으로 몰카 반대 및 소지 허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말뿐인 정부”, ‘일회성인 정부’를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젠더폭력 대책을 발표한 뒤 몰카 피해 방지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지만 통과된 게 하나도 없다. 방심위가 몰카 영상을 삭제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삭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2차 시위 뒤 드러났다.

성차별 발언을 반복한 국방장관 송영무, 저급한 여성 인식을 드러낸 청와대 비서관 탁현민 등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높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용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2차 집회 뒤인 6월 15일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탐지기 지원 50억 확보, 불법촬영물 공급자 수사 강화 등을 약속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 전수도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 대규모 시위 덕분에이다.

그러나 ‘불편한 용기’ 측은 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요구하며 적어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류 정치권과 주류 언론의 반쪽 관심을 경계하며 계속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현명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항의의 표현이 3차 집회에서 나왔던 것이다. 몰카 관련 수사가 그동안

편파적이지 않았다는 문제인의 3일 국무회의 발언을 성토하며 대통령 풍자 퍼포먼스도 벌였다. 완전히 옳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일부 표현을 두고 일부 언론과 친문 인사들, 김어준 씨 등은 해화역 시위를 ‘과격하고 극단적인 혐오 시위’라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한 참가자가 문제인을 향해 “재기해”라고 발언하고 참가자들이 따라 외친 것과 한 여성이 ‘곰’이라고 적은 종이로 20대로 보였다. 놀라운 일이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차별 반대 집회를 이 젊은 여성들이 몇 달 세 세 차례나 벌인 것이다. “재기해”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신] 자살하다/타’라는 은어로 사용돼 왔다. ‘곰’은 문제인의 성인 ‘문’을 뒤집은 것인데, 친문 진영은 이를 문제인도 투신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자유주의자들이 관용적이라는 건 완전한 오해임을 그들이 입증하고 있다.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는 구체적 맥락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단어 사용 여부만을 놓고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인식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과정에서 극소수 참가자들이 박근혜에게 성차별적 편견이 섞인 욕설이나 위협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 운동을 ‘여성 혐오’로 비난했던 것이 부당한 것과 비슷하다.

피상적

정치인이나 훈련받은 활동가도 아닌 서민층이 다수인 20대 여성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불만을 즉자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표현 형식만 갖고 이 집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문제인을 ‘곰’으로 표현한 것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 2017년 2월 27일 문재인 캠프도 곰을 문제인의 상징 이미지로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야 해당 여성이 잘못을 한 것이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동안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수사에 대해 수사당국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신속한 수사·처벌, 신속한 삭제 등의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여성들의 성토는 전적으로 옳다.

위마드가 주도하므로 혐오 시위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옳지 않다. 최근 주최 측은 자신들이 위마드가 아니라고 밝혔다. 설사 위마드 측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해도 이 운동은 3회 만에 연인원이 10만여 명에 이르는 대중 운동이다. 참가자들(운동의 사회적 구성)을 보지 않고 운동 집행부의 성분만과 문제 삼아부정적으로 알기알부하는 것은 관심을 먼 데로 돌려 사람을 헛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불법촬영, 비동의 영상물 유포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노동계급 여성들 사이에서도 광범하다. 실제로 시위 참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차별 반대 여성 시위가 몇 달 세 세 차례나 열렸다 7월 7일 해화역 시위

가자들은 대부분 학생이거나 직장에 다니는 젊은 노동계급 여성들이다. 그것이 위마드 사이트 이용자인지 아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3차 집회 직후, 시위를 지지하고 시위의 요구를 정부가 이행토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힌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집회 현장에 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게 정점이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두 장관 말이 실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자.

“공중화장실 관리는 행안부의 고유 업무 ... ‘편파수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 ... 저의 책임이 큼니다. ... 몰카 단속과 몰카법 제표, 유통망 추적색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김부겸)

“국가기관과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성토한! ... 생생한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고,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정현백)

녹색당 신지에 서울시당 위원장도 일부 과격한 표현만 볼 게 아니라 그동안 여성이 당해 온 것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가 언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부당한 비난이다.

마녀사냥 속에서도 주최 측은 8월 4일 광화문에서 4차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불편한 용기 게시판에는 환호의 댓글이 길게 이어졌다. 다음 집회도 대규모일 듯하다. 7월 13일 주최 측은 여성가족부와 만났는데, 정부 측 요청으로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9월 국회에서 불법촬영(몰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중행동을 멈춰선 안 될 것이다.

운동의 특징

이 운동은 젊은 여성들의 자발성이 두드러진다. 자원자들로 구성된 스태프만 250명이라고 한다. 주최 측이 단일한 성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2차 시위 뒤 집회 조직 방식을 놓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다.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 가능하다는 방침만 제외하면 이 운동이 채택한 정당·운동권 참가 거부, 개인 자격 참가 방침은 2008년 촛불 운동의 초기 국면을 연상케 한다. 당시 촛불 집회에도 10~20대 청년들이 많았는데, 대개 여성이나 키즘 성향을 보였고 기존 진보단체를 포함한 공식 정치세력들에 대해 불신과 경계를 드러낸 바 있다.

몰카 범죄 피해자의 압도다수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압도다수가 남성인 상황에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이 즉자적 분노를 드러내며 분리주의적 경향(집회에 남성 참가 배제 등)을 띠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전술은 운동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들조차 분열시키는 약점이 되기 쉽다. 일상생활에



김어준 씨

위마드 한 회원의 성체 모욕 사건

마녀사냥 하기 전에 먼저 여성 차별에 대한 반감의 심정을 이해해야

이 글은 2018년 7월 1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낙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최근 위마드의 한 회원이 “성체(聖體)”(얇디얇은 빵의 형태를 띠고, 축성되고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뤄진)다에 예수에 대한 욕설을 써서 불태운 사진을 위마드 게시판에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모부님(부모님)이 천주교인이라 강제로 성당에 갔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가톨릭 교회의 여성차별에 대한 커다란 반감 때문에 이런 게시물을 올리게 된 듯하다.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 인권 정책마다 XXX 떠는데 천주교를 존중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딴노?”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경해 온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 일로 모욕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법하다. 비록 위 게시물 작성자는 성체를 “그냥 밀가루 구워서 만든 떡”에 불과하다고 여겼을지라도 말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보편적인 삶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망망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위마드 한 회원의 방법이 과격하게 느껴질지라도 여성 차별에 대한 분노와 반감만큼은 정당함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가톨릭 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정면 부정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그들 중에는 가톨릭 신자들도 적지 않다)에게 큰 분노를 안겼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위

게시물 작성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법적 처벌” 운운도 적반하장이다.

낙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낙태가 살인으로 취급된 것은 아니었다. 아직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 없던 1세기 원시 그리스도교는 낙태에 관한 공식 교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저 다양한 개인 의견이 존재했을 뿐이다.

2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낙태가 살인이라는 개인 의견이 교부들 사이에서 유력해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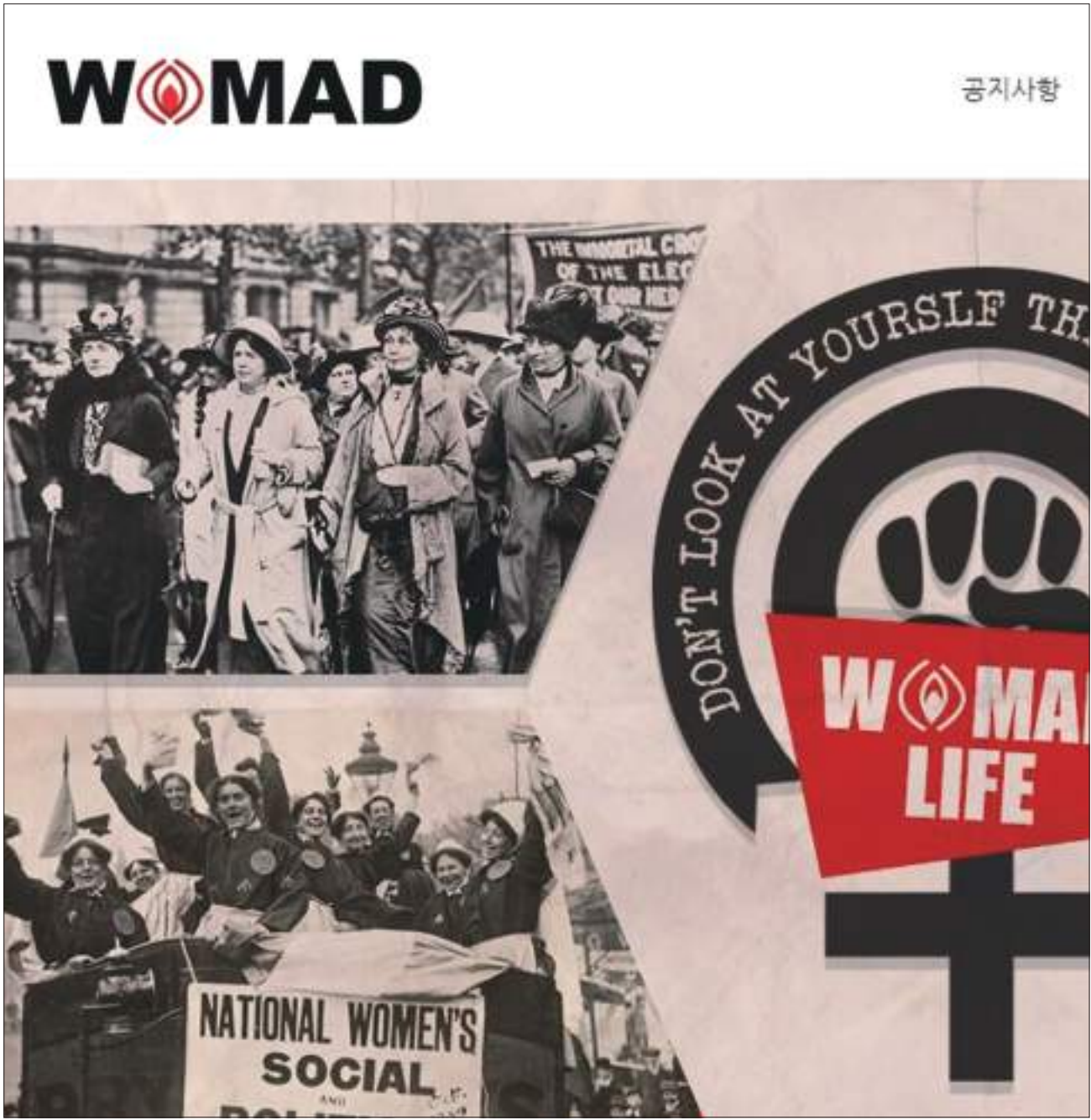
그러나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가톨릭 교회는 낙태가 살인인지 여부를 놓고 1세기에 이어 다시금 다양한 개인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됐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낙태를 강력히 변호했다(그리스 형이상학을 원용해서 그랬지만), 예로니무스도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13세기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초기 낙태를 옹호했다.

공식 교리(교황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교리)로서의 낙태 살인론은 1869년 교황 비오 9세가 확정했다. 그리고 1884년 교황 레오 13세가 낙태 살인론 교리를 재확인했다.

19세기 중엽은 자본가 계급이 자본주의적 가족을 지키고자 여성의 재생산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하기 시작하고, 또 같은 이유로 성소수자를 탄압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가톨릭 교회는 1917년에 교회법을 개정해 어떤 낙태든 파문에 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통의 가톨릭 교인들은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과 태도가 다르



여성의 낙태권 전면 부정에 앞장선 가톨릭 교회는 위마드 ‘성체 훼손’ 게시물 작성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다. 2008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가톨릭 교인 가운데 65퍼센트가 “프로 초이스”(낙태 찬성) 입장이었다. 반면 단지 22퍼센트만이 낙태 금지 법률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여성 교인들은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과 태도가 다르

데 교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위에서 보았듯, 가톨릭 교회 역사로 보면, 보통 교인들의 실제 삶을 보면 가톨릭 교회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위마드 한 회원의 행동은 여성 차별에 대한 극도의 반대 심정의 표출로서 보아넘겨야만 한다.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가톨릭 교회의 진보 인사들은 가톨릭 교회의 여성 차별에 심각한 의제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위마드의 ‘태아 훼손’ 사진 게시를 둘러싼 논란

낙태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또 다른 호들갑

정진희

일부 언론들이 위마드 사이트에 오른 낙태 게시물을 두고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최근 위마드 한 회원이 낙태를 했다며 태아 사체 훼손 사진에 자극적 멘트를 달아 위마드 사이트에 올렸고 그 아래 깔깔 대는 댓글들이 달렸다. <노컷뉴스>가 7월 16일 이를 보도하고 여러 언론들이 가세하면서 ‘위마드’가 또다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이런 끔찍한 사건을 올린 것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경찰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작가이자 가톨릭 교인 공지영도 “강아지 고양이 사체도 그러면 안” 된

다며 ‘위마드 태아 훼손’ 논란에 대해 “바로 수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그러나 이 사진은 게시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구글에서 검색되는 해외 여러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으로 드러났다. 최근 ‘성체 훼손’ 논란으로 위마드가 마녀사냥 당하자 한 회원이 낙태 반대론자들을 조롱하려고 이런 게시물을 작성한 듯하다.

사실 위마드 게시판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다소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게시물이 종종 올라온다. 그런데 ‘성체 훼손’ 사건에 이어 이 게시물을 일부 언론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이런 끔찍한 사건을 올린 것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경찰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작가이자 가톨릭 교인 공지영도 “강아지 고양이 사체도 그러면 안” 된

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그러나 지금껏 태아 사체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낙태 반대론자들이었다. 이를 보고 많은 청소년이 충격에 빠졌을 수 있지만 보수 언론들은 그들을 한번도 비난하지 않았다. 1984년 미국의 낙태 반대론자들이 만든 악명 높은 낙태 반대 영상 <소리 없는 비명>에는 태아 사체 조각들이 줄지어 나오지만 한국의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교재로 사용됐다. 이 영상은 교의로 임신 24주 이후 태아의 낙태(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1퍼센트에 불과하다)를 다루면서 편집을 통해 마치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의 위마드 마녀사냥에 속지 말고,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



미·중 무역 전쟁과 불안한 중국 경제

이정구 한신대 경제학과 강사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미 중국 경제의 둔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7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2사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6.7퍼센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사분기의 6.8퍼센트에서 0.1퍼센트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고, 2008년 이래 가장 낮았던 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6.7퍼센트라는 수치는 시진핑이 '신창타이(新常态, 신상태)'라고 언급한 중속 성장의 범위 내에 있다. 또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내세운 6.5퍼센트보다는 높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2017년 1분기(6.9퍼센트)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데다 앞으로 무역 전쟁 등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안화 하락, 부채 증가, 자산 거품, 투자 위축 등으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린다.

여러 경제지표 중에서 수출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12.8퍼센트로 지난해 동기의 8.5퍼센트를 웃돌았다. 특히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13.8퍼센트 늘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중국 제품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선매수라는 일회성 효과 때문인 듯하다. 따라서 상반기 수출 증가를 의미 있는 지표로 보기는 힘들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투자, 생산, 소비가 모두 부진하다.

특히,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13년 19.6퍼센트에서 2015년 10퍼센트, 2018년 상반기 6퍼센트로 계속 추락해, 2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2008년 이래로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공공부문 투자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직후에는 중국 정부가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국유상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장려해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 위축을 만회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 부채를 감축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정부 투자가 민간부문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디레버리징에서 경기부양으로

중국 경제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7월 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퍼센트포인트 인하해 대략 7000억 위안(117조 원)을 공급했다.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 지배층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최근까지 중국 정부는 부채를 줄이려고 약한 긴축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투자·생산·소비 지표가 모두 악

화하자 다시 경기 부양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럼 또 다시 중국의 부채 위험성은 커질 것이다.

2008년 중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160퍼센트였지만 2017년에는 260퍼센트(일부 추정치는 300퍼센트가 넘는다고)를 기록했다.

중국의 가계부채는 2007년 이래 두 배로 치솟았다. 국제결제은행은 올해부터 중국을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지목했다. 주로 가계들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가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기업 부채다. 2008년 이후 중국 국유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를 늘렸고 그 때문에 부채 비율도 증가했다. 그런데 이윤을 저하와 수출 부진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로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채무불이행(디폴트) 규모가 이미 25억 달러(165억

위안)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207억 위안)의 80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의 디폴트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디폴트나 연쇄 디폴트가 나타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도 중국 경제에 상당한 압박이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이자 중국인민은행 당서기인 귀슈칭(郭樹清)은 중국 경제는 무역 전쟁을 견뎌낼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은 비공개문건에서 "미·중 무역마찰로 양측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을 경우 중국 증시는 물론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고 중국 금융 시장과 경제가 큰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7월 초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7위안을 넘어서는 등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4월 11일 달러당 6.2699위안과 비교하면 대폭 오른 것이다.

위안화 환율 상승(가치 하락)은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져 주식시장 붕괴와 기업 파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2015년 7월에도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금 유출과 위안화 가치 하락이 벌어진 바 있다(본지 153호 기사 "시진핑 아저씨"의 상승 장세가 붕괴하다를 참조).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달러당 6.7위안을 넘지 않도록 외환시장에 긴급히 개입해야 했다.

이미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만큼 중국 경제는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성사될 가능성이 적은 듯 보인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강화되면 기존의 국제 질서는 새로운 합종연횡의 가능성을 이전보다 높일 것이다.

중국 지배층은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 홍콩의 민주주의 열망 그리고 본토 내에서의 정치적·시민적 권리 요구를 모질게 억압했다. 대신 경제 발전과 '대국굴기'로 표현되는 중국의 위상 강화로 버틸 수 있었다. 이제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그 고통이 대중에게 전가된다면 자생적으로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이 급속히 정치화할 수 있다.

중국 지배층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나리오일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세의 둔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자라고 있다. 올해 6월 쓰촨성 트럭 운전사들의 파업

기아차 계약직 노동자의 편지

일용직·계약직으로 부리다 해고한 사측

저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5월 까지 기아차 사내 업체인 '대성엑스텍'에서 오직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5분 대기조로 있으면서 일했는데, 일을 주간에 하게 될지, 야간에 하게 될지, 아니면 그날은 일을 못하게 될지 항상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간 조는 오후 1시에, 주간 조는 새벽 4시에 전화가 옵니다. "출근 할 수 있냐?"고 물으면 저는 항상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출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부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보통 다음 날 출근은 미지수였고 거의 대부분 당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간, 야간 연속근무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기회를 더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자.' 야간 조 일을 끝내고 휴게실 딱딱한 바닥에서 쪽잠을 잔 뒤에, 다시 다음 날 새벽부터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불법인 걸 알면서도 관행인 양 저를 이용해 먹었던 것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은 교대 시간에 저를 보면 "출근이에요? 퇴근이에요?" 물었습니다.



자회사

6개월 정도 죽어라 일을 하니 계약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은 두 달이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일용직과 계약직을 교대로 오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따지고 들면 해

고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계약직이 돼서도 소위 말하는 '두 탕 뛰기'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부재 인원이 있으면 다른 공정에도 뺄뺄으로 투입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2017년 10월경 계약직 갱신이 되지 않았고 출근하라는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장과 주임에게 전화해 "해고하시는 거면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다시 일용직으로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군소리 없이 출근했습니다. 업체 사장은 두 차례 면담에서 자신이 다른 업체로 가면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산조각 난 꿈

그런데 사장이 '지원로지스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뒤 "내가 언제 당신을 데리고 간다고 했냐"며 고성과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2018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채용돼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나자 '직원들 간의 불화와 근무 태도 불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업체에 근무하게 된 지 1년 11개월 되는 때였고, 1개월만 더 지나면 업체가 정식으로 채용해야 하니 해고를 한 것입니다.

제 꿈은 해고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산산조각난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지회를 찾아 노조에 가입하고 처음 해 보는 복직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 온 모든 동료들의

꿈은 정규직 전환입니다. 이 꿈은 죽도록 열심히 일하며 업체 사장과 원청 관리자들에게 잘 보인다고 이뤄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결국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을 얻지 않았습니까? 계약직, 일용직으로 일하며 서러움을 참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 노조에 가입해서 함께 싸웁시다. 더는 사측에 이용당하지 말고 힘을 모아 우리의 꿈을 우리가 성취해 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공장에서 홍보물을 나눠 줄 때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 주는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연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마치 동정하는 듯 보거나 무시하십니다. 저희를 같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동료로, 동지로 여겨 주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측은함이 아니라 동지로서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재혁 기아차 계약직 해고 노동자

젠트리피케이션 — 도시의 포식자들

김인식

2009년 두리반, 2011년 카페 마리, 2015년 테이크아웃드로잉, 2018년 궁중족발.

애초 이곳들은 서울 도심이나 그 가까운 곳에서 돈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이 장사하던 곳들이다. 그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창의성을 발휘해 자신의 상점과 그 골목을 활기차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자 부동산 개발업자와 중개인, 임대회사, 기업주들은 이런 곳들을 투자 잠재력이 있고 이익을 내는 지역으로 평가했다. 이른바 '뜨는' 지역(핫 플레이스)이 됐다.

이제 탐욕스러운 부동산 개발업자나 기업주들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렸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강요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못 견뎌 떠나기 시작하자 그 빈자리에) 다국적 기업들의 프랜차이즈, 고급 양품점, 고급 주택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지난 몇 년 새 서울에서 나타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도시 재생'이라고 부른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에 '도시재생사업단'을 발족했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도 도시 재생에 적극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시켰다.



진보노자

"빛 좀 갇아 나가며 장사가 좀 되겠다 싶었는데" 꽃게날 처치가 된 서민들

역전

젠트리피케이션은 대도시의 오래된 도심에서 일어나는 공간적 변화를 뜻하는 용어로, 1960년대 중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의 전통적인 중간계급인 젠트리에서 파생된 용어다.)

노동계급 주택 및 방치된 주택이 재생돼 중간계급의 동네로 바뀌는 것을 가리켰다. 그 전까지는 도시화가 외곽으로 진행되고 중·상류층 거주지가 도심 외곽으로 나가는 교외화 경향이 도시 발전의 지배적 형태였다.(한국에서는 분당과 일산 신도시 개발이 그런 경향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역전돼, (신)중간계급이 도심으로 귀환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하층민은 이곳으로부터 밀

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은 특히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핵심적 일부가 됐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 뉴타운 개발: 개축이 아닌 신축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전면 철거와 재개발에 기초한 도시 개발.

· 강남 가로수길이나 한남동: 금융업 등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갑부들이 중간계급마저 쫓아내는 슈퍼 젠트리피케이션.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등장한 것은 대략 2014년부터다. <한겨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렇게 정의했다.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시의 주거지로 유입되면서 주거 비용을 끌어올리고, 비

싼 월세나 집값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 (2014년 11월 24일치)

젠트리피케이션은 중간계급의 유입, 지가와 임대료의 상승, 기존 주민의 전치(displacement, 기존 거주자가 쫓겨나고 밀려나는 과정)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계급에게 불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빚대,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임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슬픈 우스갯소리마저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사악한 본질을 잘 보여 주는 해외 사례 중 하나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이다. 지방의회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올림픽 준비를 구실로 런던 동쪽 변두리 지역을 철거했다.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이 지역을 국제 스포츠·놀이 공원으로 바꿨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부자들의 유희와 이윤을 위한 사업임을 보여 줬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자본가들이 쏟아부을 수 있는 투자 규모도 보여 줬다.

지상전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주의가 벌이는 빈곤과의 전쟁의 지상전이다. 상점에 팔린 부속 공간, 주택, 공공 장소,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와 지역 공동체를 시장 투기와 상품 거래로 만들어 불평등과 계급분리를 조장한다.

미국인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역사학자인 마이크 데이비스는 이를 "건조(건축) 환경 수준에서 공간 아파트화이트", "새로운 계급 전쟁"이라고 명명했다.

자본가들은 씹없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창출하고 지배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장소(토지, 건조 환경)와 사물(재화, 서비스, 자연 자원)을 수탈할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탐욕스러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곳을 전략적 "재생" 지역으로 노린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중개업자, 대형 임대회사, 친기업 정치인들이 부동산·주택·지역사회 등을 상품화한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주의적 시장화가 우리의 도시·동네·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스며들고 자리잡는 한 형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공포, 전치, 불평등에 의해 촉진되고 성장한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사회 평화"와 같은 말이다.

우리는 "사회 평화"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 사회적(공공) 주택 대량 보급을 요구한다. 또, 공공서비스 확대, 복지 확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서촌 궁중족발 지키기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선 항의는 이런 진보를 위한 집단적 투쟁의 일부다.

이슬람 혐오 — 인종차별적 편견일 뿐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난민을 거부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수십만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런 난민 비난은 이슬람·무슬림 혐오적 거짓 선동을 기초로 했다. 인도 출신의 영국인 사회주의자 탈라트 아흐메드가 이슬람·무슬림 혐오적 편견을 반박하며, 이슬람·무슬림 혐오가 어디서 비롯했고 어떻게 싸울지를 주장한다. 이 글은 2013년 9월에 쓰였다. 축약되지 않은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삽입한 것이다.

[2013년] 5월 울위치에서 일어난 영국인 병사 리 릭비 살해 사건을 계기로 무슬림을 향한 폭력이 우려스러운 정도로 분출했다.

‘반(反)무슬림 공격 측정 프로젝트’는 릭비 살해 사건 이후 한 주 동안에만 이슬람 혐오 공격 212건이 일어났고 기록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532건이 일어났는데 말이다. 런던 경찰청은 울위치 사건 이후 무슬림을 향한 공격 신고가 런던에서만 여덟 배로 증가했다고 인정했다.

이런 공격들은 이슬람 혐오가 고조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언론은 울위치 사건의 범인들에게 “도축용 칼을 휘두르는 이슬람 광신도”라는 딱지를 붙였다.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은 무슬림들에게 이 사건을 분명하게 비난하라고, “선한” 무슬림이라면 영국에 충성심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설문조사에서 세 명 중 한 명이 무슬림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9·11 공격 이후 10년 동안, 무슬림을 테러리즘, 광신, 배척성과 엮는 것은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됐다. 이슬람 혐오적 사고방식의 “정상화”는 어떻게 이슬람 혐오가 영국 사회에서 오늘날 인종차별의 최첨단이 돼 왔는지를 보여 준다.

[2013년] 7월 [보수언론] <데일리 메일> 신문은 TV 공영방송에서 무슬림의 성월(聖月)인 라마단 중에 매일 기도 시간을 알리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조롱했다. 그런 방송은 “분열을 초래”하고 “상스러운 일”이며 “지식인 기득권층의 반기독교적 편향”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일상적으로 무슬림을 비하하는 것은 주류 문화 깊숙이 침투했다.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前) 감독인 론 앳킨슨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료 참가자가 스웨터를 [히잡처럼] 머리에 뒤집어썼을 때 “폭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죠?” 하고 물을 정도이다.

다양

이슬람 혐오의 부상은 영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모스크 건설, 침탑 건립, 머릿수건이나 이슬람식 머리 스카프 [히잡] 착용 등이 금지되면서, 이른바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있다는 공포에 기반한 반무슬림 서사가 제도화해 왔다.

이슬람 혐오적 발언은 편견을 기초로 한다. 무슬림은 사회에 통합되기를 거부하고, 무슬림의 자녀는 영어를 말할 줄 모르고, 무슬림은 그들만의 폐쇄적 공동체 안에서 살고, 영국·유럽·“서구”의 가치에 적대적인 신앙과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이런 편견은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인종차별의 책임을 그 사회가 아니라 인종차별의 피해자들에게 지운다.

오늘날 횡행하는 이슬람 혐오를 전혀 새로운 현상으로 보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이슬람 혐오는 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들에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며, 무책임하다”는 딱지를 붙이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기존의 인종차별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반무슬림 인종차별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슬람 혐오적 사고방식은 또한 이슬람과 무슬림을 획일체로 그린다. [그러나] 무슬림은 다른 “신앙” 공동체만큼이나 이질적이고 다양하다. 영국에 사는 무슬림만 해도 인도 아대륙, 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중동, 터키, 동유럽에서 왔다.

이 무슬림 공동체들의 전통은 그들 고향 사회의 국민적, 민족적 특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슬람교는 다른 모든 종교처럼 유동적이고, 변화를 겪고, 발전 과정에서 여러 요소의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변형된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무슬림은 계급으로도 나뉜다. 영국에서 “지역사회 지도자”로 여겨지는 무슬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중간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그 기반은 성직자 계층과 무슬림 사업가들이다. [2013년] 6월에 [보수당의]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은 세계 이슬람경제포럼이 런던에서 열리도록 초청했다. 그 목적의 하나는 런던에 이슬람 은행을 설립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런 자본가적 이익 단체들은, 사무실, 상점, 학교, 병원에서 일하며 도시 외곽 주택 단지에 사는 다수의 노동계급 무슬림과는 천양지차다. 이슬람 혐오, 더 넓은 인종차별, 경찰의 감시와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대체로 노동계급 무슬림이다.

선 대 악

“선한” 무슬림과 “악한” 무슬림을 가르는 것은 지배자들만이 아니다. 많은 자유주의적 평론가들과 일부 좌파도 이슬람주의를 극우나 파시즘만큼이나 나쁜 것으로 여긴다.

이슬람주의를 파시즘과 동등하게 보는 이런 경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뉴레프트 리뷰>의 옛 편집자인 고(故) 프레드 할리데이는 1979년 이란 혁명을 “파시즘의 얼굴을 한 이슬람”이라고 묘사했다. 1990~1991년 제1차 걸프 전쟁 당시 마이클 이그나티에프 같은 자유주의적 평론가들과 할리데이는 “이슬람 파시즘”에 맞서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주의자는 왜 차별과 천대를 당



이슬람 혐오는 인종차별의 최신 형태 2018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하는 사람들이 종교 사상을 신앙이나 정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는지 이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슬람주의를 파시즘과 결코 동일시하지 않는다. 파시즘은 궁극적으로 모든 형태의 노동계급·노동조합 조직을 파괴할 도구로서 자신의 유용성을 지배계급에 인정받고자 하는 중간계급의 운동이다. [반면,] 이슬람주의 활동가들은 (그들의 정치의 악점이 무엇이든 간에) 왜곡되고 일관성 없는 방식일지라도 체제에 도전한다.

포섭과 탄압

인종차별의 한 형태로서 이슬람 혐오는 사회의 최상층에서 나왔다. 이슬람 혐오를 지배자들은 마녀사냥과 속죄양 삼기에 이용할 뿐 아니라, 노동계급 내 분열을 촉진하려고도 고안한 것이다. “이슬람의 위협”을 들먹이며 끊임없이 대중을 자극하는 것은 이주를 제한하고 “영국적 가치”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감시하는 가혹한 조치들과 함께 이뤄졌다.

[2013년] 6월 아시아계 남성 여섯 명이 영국수호동맹 행진을 공격하기로 계획했다는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영국수호동맹과 영국국민당이 폭력, 인종차별, 반무슬림 학살 선동을 일삼는데도 경찰과 국가는 그들의 행위를 아주 관대하게 다루는데, 이와 대조적이다.

강압 정책은 포섭 전략과 결합된다. 울위치 사건 이후, 무슬림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활동가들에게 영국적 가치에 헌신하고 동화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는 압력이 매우 확대해졌다. 마찬가지로 2005년 7월 런던 폭탄 공격 이후 많은 무슬림 활동가들이 수세에 몰려, 전쟁과 제국주의에 공공연히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받았다.



이슬람 혐오는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사회 불안의 책임을 떠넘기는 데 이용돼 왔다

이슬람 혐오에 직면한 일부 무슬림의 반응은 수세적이다.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를 바라며 세상에서 은둔하기를 택하거나 조용히 엎드려 지내자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단절되기를 택하면 이슬람을 대표하는 “상징”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정한 종류의 옷만 입는 다거나, 돼지고기나 술을 삼간다거나, 전통 혼례나 특정한 종교의식 준수 등 말이다.

이런 대응은 이해할 만하지만, 일종의 “라이프스타일주의” 같은 구실을 한다. 이는 기존 제도 내에서 구별되는 “무슬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선거 정치와 잘 어울린다. 이런 방식의 주된 약점은 이슬람 혐오의 뿌리에 도전하기보다는 모든 무슬림의 진정한 관심사와 불만이 개혁주의 전략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울위치 사건이나 2005년 런던 폭탄 테러로 이어진 급진 이슬람주의 사상으로 이끌렸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병사가 죽고 비행기

와 사람이 납치당하든 상관없이, 국가를 위협할 수 없고 국가는 탄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저항

이슬람 혐오와 싸우는 것은 인종차별에 맞서는 싸움의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 이슬람 혐오의 뿌리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압도 다수를 희생시키도록 조직된 사회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지배력을 결속, 지속, 강화하기 위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데서 언제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이용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이슬람 혐오는 인종차별 일반이 그렇듯이 계급지배의 수단이다. 우리는 계급사회의 물질적 조건을 제쳐 놓고서는 이슬람 혐오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인종차별과 계급 분단을 기초로 하는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3년 9월호 번역 김동욱

일자리 위기는 이주노동자 아닌 사용자 책임

장우성

5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0퍼센트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도 18년 만에 가장 높다.

사용자들이 장기 경제 침체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조선소와 한국GM의 인력 감축은 생생한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마련과 개선을 외칠 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노골적으로 기업주들을 편들고 있다.

그러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한 것이 마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조치인 듯이 주장한다. 우파와 보수 언론들도 '외국인 때문에 줄어드는 일자리'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척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걱정해서 그러는 척했던 것처럼, 그들이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양 위선을 펼 때는 진정한 속내가 따로 있다.

우파와 정부의 노림수는 경기 침체 하에서 커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기업주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건설업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대부분은 현재 이행률이 제로 수준이다. 기업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오로지 민주노총이 폐기를 요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만 이행되고 있다. 정작 필요한 조처들은 미뤄 둔 채,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위해 이주자를 배척하지는 것은 노동자들끼리 경쟁시켜 돈도 아끼고 저항도 약화시키려는 사용자를 돕는 꼴

희생양 삼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 불안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기업들의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단계 하도급은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강요해 온 주범이다. 최근 건설 사용자들은 유연근무제 확대까지 동원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려 한다.

희생양

일부 건설 노동자들은 기업주들이 단계 하도급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보다 '내국인 고용 우선' (이주노동자 고용 규제)를 요구하는 게 고용 안정을 위한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노동자 한 집단을 희생시켜 다른 노동자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논리다. 우파와 기업주와 정부는 이런 생각

을 노동자들 사이에 퍼뜨리곤 한다. 그것이 노동자에게 독, 기업주에게 약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급처럼 경기가 후퇴할 때는 더욱 위험하다. 정부와 기업주는 취약 집단 희생양 삼기를 통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피한 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이 투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노동자들이 분열하면 파업을 해도 그 효과가 감소하기 쉽다. 반목해 온 노동자 집단이 대체인력으로 나서기라도 한다면 재앙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주노동자 고용 규제가 아니라 기업주의 양보를 강제할 때만 실질적인 일자리 개선이 가능하다.

건설 노동자들은 기업주에 맞선 끈질긴 투쟁으로 일자리 개선

을 이룬 경험이 적잖다. 2012년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 방식 도입도 그런 사례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일부 향상되고 타워크레인 설치 대수가 늘어 일자리도 30~40퍼센트가량 늘어났다.

기업주들이 양보하도록 만들려면 더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대우에 고통받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손을 내민다면 얼마든지 함께 싸울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건설노조에 대거 가입했던 이전 경험을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기업주와 부당한 제도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설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이정원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약을 문제 삼아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행위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노조 규약에서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

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고 있다. 대다수 기간제 교사들이 계약 종료 때마다 구직을 위해 실업을 겪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정한 조건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며 학교 교육을 떠맡치고 있지만,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불안과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노조 설립 신고마저 반려한 것은 기간제 교사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서 것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개기 계약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제 교사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노조가 필요한 이들인데, 이들에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아박하기 짝이 없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정부가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불안과 온갖 차별을 해결할 정규직 전환은 외면하더니 이제는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들의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로 교원노조법의 부당성은 익히 알려졌지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해 이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옥죄고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는 지방선거 이후 문제

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6월 20일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일방적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했다.

7월 11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위'는 고용노동부에게 설립 신고 반려 취소를 요구하고, 기간제 교사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한 연대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하반기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의 일부로서 함께 싸워 나가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1000여 명이 새롭게 조직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생활 안정, 저임금 해결을 바랍니다”

조명지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조합원수는 두 달 만에 1000여 명이 늘었다. 직접고용에 대한 기대감과 조직화 노력의 결과다.

지난 7월 14일 열린 집회는 성장하고 있는 노조의 분위기를 잘 보여 줬다.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과 삼성 본관 앞에 모였는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집회로는 역대 최대였다.

새롭게 조직된 노동자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조직이 잘 안 되던 내근직 노동자들도 많았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주력 업종인 휴대폰 수리 업무를 하고 있어 투쟁에 나서면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센터 전체가 노조에 가입해 센터 문을 닫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100퍼센트예요.”

“그동안 거의 조직화가 안 됐던 전라도 지역에서도 센터가 여러 개 조직됐어요. 매일 일 끝나고 다른 센터 돌아다니면서 조직화했던 동지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노동자들은 “이제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건당수수료에 기반한 임금체계 때문에 성수기에는 장시간노동에, 비수기에는 저임금에 고통 받아왔다.

“무엇보다 임금체계를 바꿔야 해요. 건당수수료를 없애고 기본급을 높여서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어야죠.”

“이제는 우리도 여름에 가족들이랑 여름휴가를 가 보고 싶어요.”

노동자들에 따르면, 교섭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경력 인정, 직고용의 범위, 임금체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측이 본사 직원들과 별개의 임금체계를 제시하며 차별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 노동자들은 사측이 “시간을 질질 끌며 장난질을 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불안한 마음도 들어요. 삼성이 꿈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그동안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온갖 탄압과 거짓말을 해 왔던 것을 떠올려 보면, 이런 노동자들의 걱정은 괜한 게 아닐 것이다. 노동자들이 그동안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 즉 집단적 투쟁을 통해 사측이 또다시 뒤통수를 치거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조직화가 성과를 내고 있고 삼성 노조 탄압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세도 여전히 유리하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서 단호한 투쟁에 나선다면 노동자들이 원하는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아직 망설이는 노동자들에게도 노조가 대안임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역대 최대 집회 7월 14일 청와대 앞



“고용안정 대책 마련하라” 7월 13일 현대중공업 상경 투쟁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에 반대해

현중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나선다

김지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전면 파업을 한다. 임금 삭감과 고용 위협 등에 맞서 투쟁에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은 현 상황에 위기감이 크다. 노조가 2014년 민주파 집행부 등장 이후 두 번째로 전면 파업을 선언한 이유다. 그동안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호소해 온 활동가들은 파업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 동결과 기본급 20퍼센트 반납,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성과연봉제 도입, 유연근무제 도입, 휴일 축소와 월차 폐지 등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임금 삭감과 해고로 고통을 전담해 왔다. 반면, 지난해 현대중공업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약 12조 원이나 늘어 약 32조 원이 됐다.

현재 사측은 해양플랜트(해양 석유·천연가스를 시추·생산하는 장비) 일감이 바닥나자 노동자 수천 명의 일자리도 위협하고 있다. 남아 있는 정규직 2300여 명을 무급 휴직으로 돌리고 비정규직 2600여 명을 해고하려는 것이다.

사측의 공격은 일감이 없는 곳만을 향하는 것도 아니다. 일이 있는데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외주화·분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엔진·플랜트·중앙기술원과 지난해 기업 분할된 현대일렉트릭 등에서 일하는 900명 정도가 비정규직 신세로 내몰

리고 있다.

지난 4월 현대중공업 사측은 대규모 ‘희망퇴직’을 압박하며 수천 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반발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자, 부문별로 노동자들을 각 개격파하는 전술을 꺼내든 것이다.

이렇게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는 공격에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파업은 그런 단결 투쟁의 기회다.

해양플랜트 부문의 일감이 바닥 났다고 고용을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니

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문은 지난해부터 수주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임금·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조선 부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해양플랜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측은 STX, 성동조선 등을 보라며 “고통 분담(사실은 전담)만이 살 길”이라고 말한다. 사용자들은 이런 식으로 바닥을 향한 경쟁을 압박하며 조선업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 내렸다.

울 초 현대중공업지부 지도부가 순환 휴직, 상여금 월할 분할(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등을 양보했지만, 사측은 공격을 내려놓기는커녕 더 한층 공격하고 있다. 단호한 투쟁으로 양보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상황은 노동자들이 싸우기엔 유리한 조건이다. 민주당이 집권한 울산시와 동구청이 7월 25일 지역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들이 광범한 대중 정서에 눈치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정치인들을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상반기 구조

조정을 밀어붙인 장본인이고, 울산시장 송철호는 노사 협력을 강조하며 노동자 양보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선거에서 드러난 대중의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착취 강화 공격에 불만을 터뜨리는 지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운다면 커다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은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감 있게 기층에서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1사 1노조 시행규칙 통과 조직 확대와 원하청 단결 투쟁의 기회

현대중공업지부가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통합하는 1사1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4일 원하청 공동 집회를 열었고, 9일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통합을 위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대의원대회 전부터 일부 우파적 의견 그룹들은 “1사1노조의 피해자는 조합원”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는 반동적인 선동을 벌였다. 그러나 통과하게도 민주파 대의원과 활동가들이 단호하게 논쟁을 벌여 규칙을 통과시켰다.

이번 노조 통합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라



치기 하는 상황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사측은 사내하청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재취업도 어렵게 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

입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체불, 업체 폐업 등으로 고통을 당했다.

노조 통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의 문을 두드리고 투쟁에 나설 용기를 줄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투쟁의 희망을 보여 줘야 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민주파 집행부 등장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를 받았었다. 민주파 집행부 초기 일부는 조합원이 아닌데도 정규직의 투쟁 집회에 참여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규직 노조 지도

부는 그동안 구조조정 공세 속에서 ‘비정규직의 우산’이 되지 못했다. 조선업 전반에서 노조 지도자들은 ‘내코가 석자’라며 비정규직의 해고에 눈감았고, 현대중공업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일부 활동가들은 ‘원하청 연대는 정규직의 임금 양보’라는 식의 잘못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진정한 연대 투쟁을 구축할 수 있다. 소수지만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해고나 임금 체불에 맞선 경험도 있다. 활동가들은 노조 통합과 조직화 캠페인의 분위기를 활용해 기층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